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2월 19일 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11면	횡성 서원초 지역 살리기 마중물 역할	1
江原日報	02면	강원도의회 도민 안전 강화 지원 나선다	2
강원도민일보	02면	도의회, 강원연구원 감사조직 개선 당부	3
강원도민일보	15면	"평창교육도서관 신축이전 재추진 나서야"	4
동방일보	10면	최종수 의원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5
신아일보	온라인	최종수 강원특별자치도의원,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	6
동방일보	10면	조성운 의원, “학생의 교통안전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	7
일간투데이	14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운 의원 “학생의 교통안전 사고 ...	8
스포츠서울	온라인	정재웅 강원자치도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	9
중부뉴스통신	온라인	정재웅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	10
강원도민일보	02면	도의회 '생활체육지도자·교권 보호' 지원 조례 가결	11
강원신문	온라인	정재웅 도의원,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12
江原日報	04면	도내 첫 교권보호 조례 마련된다	13
이코노믹포	온라인	강원도의회 "이영욱 의원,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	14
江原日報	21면	‘봄내 기해동행전’ 춘천미술관서 개막	15
江原日報	13면	거진2리 경로당 개소식	16
강원도민일보	17면	고성 거진2리 경로당 개소식	16
江原日報	10면	홍천고 총동문회 회장 이·취임식	16
江原日報	21면	[동정] 엄윤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부위원장(인제...	17
강원도민일보	14면	[동정] 엄윤순(인제) 도의회 농림수산위 부위원장	17
강원도민일보	12면	[동정] 박호균(강릉) 도의원	17
강원도민일보	04면	김 지사 '산불 골프' 보도 KBS 상대 손배소 패소	18
강원도민일보	04면	공상공무원 간병비 지원 하루 15만원으로 인상	18
江原日報	13면	고성군의원 의정비 40만원 인상되나	19
강원도민일보	14면	인제 상수도 현대화 5년간 76억원 절감	19
강원도민일보	17면	양양군 친환경 연어자연산란장 조성 본격화	20
江原日報	16면	철원 마현리 13초소 이전 가시화	20

江原日報	01면	춘천교대·강원도립대 포함 전국 첫 1도 1국립대 뭉치나	21
江原日報	02면	춘천교대·강원도립대 포함 전국 첫 1도 1국립대 뭉치나	21
江原日報	02면	원주~춘천~철원 철도 신설·GTX 연장될까	22
江原日報	12면	강릉원주대, 강원대와 통합 진통	22
강원도민일보	02면	강개공 '춘천 봉어섬·고성 잼버리' 출자 경영개선 나선다	23
강원도민일보	10면	춘천 호수정원 조성 '사유지 보상' 관건	23
江原日報	11면	"하루 2천톤 물 퍼내면 지하수 고갈 불 보듯"	23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공연 축제 관광자산화 전망 밝다	24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국제스케이트장 '강원'이 타당하다	25
江原日報	19면	[사설] 기업들의 출산장려책, 세제 혜택 등 강구해야	26
江原日報	19면	[사설] 의대생 집단 휴학, 사회적 책무 저버리는 처사다	27

江原日報

2024년 02월 19일 (월)

지역 11면

횡성 서원초 지역 살리기 마중물 역할

군·도교육청 등 업무협약
스포츠 교육센터 건립 추진

【횡성】서원초교가 침체돼 가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구심체로 거듭난다.

횡성군과 강원자치도교육청, 횡성교육지원청, 서원초교는 지난 16일 횡성군청에서 신경호 교육감, 김명기 군수,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 김경녀 횡성교육장, 이병필 서원초 교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원초교 스포츠 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 업무협약을 했다.

서원초교 1층에 학생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돌봄교실, 실내 골프 연습실, 피트니스센터를 설치하고, 옥상에는 학생들을 위한 인조잔



◇횡성군의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업무협약식이 지난 16일 횡성군청에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김명기 군수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디 운동장과 농구장 등 체육시설을 갖추는 게 골자다.

서원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특성화 교육을 통해 작은 학교를 살리고, 이를 통해 지역 소멸을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지난달에는 서원면소재지 맞은편에 조성 중인 벨라 45CC와 서원초교가 골프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골프 특성화 교육의 발판을 마련했다.

준비 중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학생들이 골프와 관련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생활체육 인프라 확보와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생활인구 유입 등의 성과가 기대된다.

유학렬기자 hyoo@kwnews.co.kr

江原日報

2024년 02월 19일 (월)

종합 02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기영)가 지난 16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강원도의회 도민 안전 강화 지원 나선다

관련 조례안 가결 통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 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고 예방을 촉구하면서 안전한 강원자치도를 위한 목소리를 냈다.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16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25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박기영(국민의힘·춘천) 안전건설위원장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는 소방관들이 재난·재해, 위급한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활동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건설위원회는 또 이날 도소방본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면서 사고 예방을 촉구했다. 양숙희(국민의힘·춘천) 의원은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적용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된다”면서 “최근 5년간 강원 차량화재 건수가 1,176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홍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는 조성운(국민의힘·삼척)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교통안전교육

세부 사항 중 자전거,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했다. 또 이영욱(국민의힘·홍천) 의원의 ‘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정재웅(더민주·춘천) 사회문화위원장의 ‘스포츠 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김용래(국민의힘·강릉) 의원의 ‘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 최종수(국민의힘·평창) 의원의 ‘4H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등도 통과돼 오는 23일 본회의의 결을 앞두고 있다. 이현정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19일 (월)

종합 02면



제325회 제2차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길수)는 지난 16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2024년도 강원연구원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었다.

도의회, 강원연구원 감사조직 개선 당부

연구원 '직원 소급승진' 재심 계획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강원연구원 감사팀의 강화를 재차 당부하고 나섰다.

임미선(비례) 의원은 지난 16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진행된 강원연구원 업무보고에서 "(강원도) 특정감사에서

시정주의 등 처분을 받게 됐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감사팀, 법률팀 강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는데, 조직과 인력이 종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개선을 당부했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이날 '직원 소급 승진' 사안과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요청할 계획을

밝혔다. 연구원은 소급 승진 건과 관련, 강원도 감사위 조치에 따라 관련자 징계, 지급분 회수 등 조치를 내렸었다. 이에 해당 직원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는 최근 이를 인용했다. 현 원장은 "(직원 승진) 결정을 하기 전까지 많은 자문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위 결정을 받았을 때 쇼크였다. 해당 연구위원이 지방노동위에 제소했다. (결과를) 바로 수용할 수 없어 중앙노동위에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영섭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산업위 업무보고에서 "사업자 측이 2지구 사업 승인을 전제로 대출 등 2, 3지구 사업 자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2지구 승인이 된) 지금은 다른 금융권을 알아보겠다는 상황"이라며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설화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19일 (월)

지역 15면

“평창교육도서관 신축이전 재추진 나서야”

도의회 교육위 예산 전액 삭감
평창읍변영회-도 교육감 면담
도교육청 추경예산 반영 요청

평창읍지역의 현안사업인 평창교육도서관이전 신축사업 예산이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평창읍변영회와 평창중·고 총동문회 임원들이 지난 16일 신경호 도교육감을 면담, 이전 신축사업을 재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평창읍 중앙로 83-17에 위치한 평창교육도서관은 지난 1993년 신축돼 30년이 넘으며 노후됐고 진입로가 협소하고 가파르며 주차공간도 열악한 외진 곳에 위치해 그동안 이전 신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



평창교육도서관 이전 신축사업 예산이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평창읍변영회와 평창중·고 총동문회 임원들이 지난 16일 신경호 도교육감을 면담, 이전 신축사업을 재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제공=평창읍변영회

다. 특히 신경호 교육감이 당선 후 평창을 방문해 이전 신축을 약속, 사업이 급물살을 탔고 도교육청은 평창군과 협의해 지난해 평창읍 하리 평창중앙교회 인근지역에 4899여㎡를 이전 부지로 선정하고 사업비 149억원을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열린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건축한 지 30년밖에 되지 않았고 이용자도 많지 않으며 지난 2022년 6억원을 들여 시설보수공사를 추진했던 점, 이전 후 현 건축물의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예산이 전

액 삭감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주민들은 크게 반발하며 최근 평창읍내 각급 사회단체가 현수막 30여개를 게첨, 교육도서관 이전 신축 재추진과 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종수 평창읍변영회장, 이정균 평창중·고 총동문회장과 임원진은 지난 16일 도교육청을 방문, 신경호 교육감을 면담하고 사업 재추진과 1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고 신 교육감은 사업 재추진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수 회장은 “평창교육도서관이전 신축사업은 주민들의 독서와 여가는 물론 복합문화시설로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도교육청의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 반드시 사업이 추진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신현태

동방일보

2024년 02월 19일 (월)

지역 10면

최종수 의원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최종수 의원(평창2)이 대표 발의한 '4에이치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월 16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영농정착 활성화'를 조례 목적으로 명시 ▲'4에이치육성 지원'을 '4에이치활동 지원'으로 제명 변경 ▲결산보고 의무 규정 등이며 이외에도 조례의 체계와 조문 표현을 일괄 정비하는 것이 조례안 발의의 의도이다.

또한, 도내 4에이치활동 단체를 대표하는 '대표단체'를 지정하고 대표단체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

서를 제출하게 함과 동시에 결산보고의 의무도 규정하여, 재정 지원의 범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최종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위축되어 있는 도내 4에이치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고 투명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정비하여, 장차 강원특별자치도 영농정착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노도경 기자 dongbangmedia@naver.com

신아일보

2024년 02월 17일 (토)

지역

최종수 강원특별자치도의원,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조덕경 기자

조례 목적에 '영농정착 활성화' 명시결산보고 의무 규정에 따라 재정 지원의 범용성과 투명성 제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최종수 의원(평창2)이 대표 발의한 '4에이치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영농정착 활성화를 조례 목적으로 명시 △4에이치육성 지원을 4에이치활동 지원으로 제명 변경 △결산보고 의무 규정 등이며 이외에도 조례의 체계와 조문 표현을 일괄 정비하는 것이 조례안 발의의 의도이다.

또한, 도내 4에이치활동 단체를 대표하는 '대표단체'를 지정하고 대표단체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제출하게 함과 동시에 결산보고의 의무도 규정하여, 재정 지원의 범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최종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위축되어 있는 도내 4에이치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고 투명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정비하여, 장차 강원특별자치도 영농정착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

2024년 02월 19일 (월)

DB 동방일보

지역 10면

조성운 의원, “학생의 교통안전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운 의원(국민의힘, 삼척1, 사진)은 제325회 임시회 2차 교육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로 개정했다.

교육위원회 조성운 의원(사진)은 2020년 3월 조례 제정 이후, 전기자전거를 비롯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전 및 보호장구 착용 지도에 대한 교육 강화가 요구되며, 특히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 중 자전거,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특히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

다. 또한 통학로 안전 확보 조항을 비롯하여 학교 안팎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지자체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했다.

조성운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학생의 등·학교길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각종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여 교통안전에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도경 기자

dongbangmedia@naver.com



일간투데이

2024년 02월 19일 (월)

지역 14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운 의원 “학생의 교통안전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세부사항 보완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신설

노덕용 기자 nod2015@dtoday.co.kr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운 의원(국민의힘, 삼척1)은 제325회 임시회 2차 교육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로 개정했다.

교육위원회 조성운 의원(사진)은 2020년 3월 조례 제정 이후, 전기자전거를 비롯해 개인형 이동장치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안전운전 및 보호장구 착용 지도에 대한 교육 강화가 요구되며, 특히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야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 중 자전거,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내용을 보완했으며, 특히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

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했다. 또한 통학로 안전 확보 조항을 비롯해 학교 안팎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지자체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했다.

조성운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학생의 등·학교길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각종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해 교통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문화매일 등 32개 언론사 보도

스포츠서울

2024년 02월 16일 (금)

사회

정재웅 강원자치도의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활성화 토대 마련



정재웅 의원. 사진 |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스포츠서울 춘천=김기원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의원(춘천5)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지원하여 문화예술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고유한 역사문화 정체성 확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여,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박물관 및 미술관 전문인력 육성·지원에 필요한 경비 지원 마케팅 홍보 지원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지원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어,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이 운영·발전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웅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이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면,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립에도 큰 동력을 만들고, 나아가 문화예술 관광객 증가에도 크게 기여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2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acdck4021@sportsseoul.com

2024년 02월 16일 (금)

중부뉴스통신

지역

정재웅 강원특별자치도의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활성화 토대 마련

[강원=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 강원도의의회청사전경(사진=강원도의의회)

[강원=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지원해 문화예술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고유한 역사문화 정체성 확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박물관 및 미술관 전문인력 육성·지원에 필요한 경비 지원 ▲마케팅 홍보 지원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지원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어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이 운영·발전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웅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이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면,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립에도 큰 동력을 만들고 나아가 문화예술 관광객 증가에도 크게 기여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2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강원=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desk@jungbunews.com

신한뉴스, 미디어이슈 등 33개 언론사 보도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19일 (월)

종합 02면

도의회 '생활체육지도자·교원 보호' 지원 조례 가결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생활체육지도자에 근속수당,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도자 처우를 개선하는 조례를 가결했다.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지난 16일 제325회 임시회 2차회의를 열고 정재웅(춘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를 가결했다. 조례는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해 우수 스포츠클럽이 개최하는 체육대회,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및 훈련 지원, 우수 생활체육지도자 포상 등(제4조)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우수 등록스포츠클럽 지원에 5000만원(도

50%·시군 50%),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수당 지원(도 30%·시군 70%)에 877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클럽 80개소에 각 100만원·150만원을 지급해 대회 및 강습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길선)는 이날 이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조례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지원 등을 명시했다. 두 조례는 오는 2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후, 시행된다. 이설화

2024년 02월 16일 (금)

강원신문
지방시대 글로벌 리더 gwnews.org

자치의정

정재웅 도의원,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발의

정찬범 기자

스포츠클럽 등록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기틀 마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사진)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이 1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체육복지 향상을 위한 도 내 스포츠클럽 등록의 활성화와 열악한 조건에서 근로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되었다.

'스포츠클럽법'이 2022년 6월 16일 시행된 이후로 지난 12월, 문체부에서는 전국 50,000개의 등록스포츠클럽 만들기를 목표로 세웠지만 아직 홍보 부족, 지원사업 부재, 지자체 담당자 업무숙지 미숙 등의 이유로 강원도에는 고작 29개의 스포츠클럽만이 등록되어 있다.

또한,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정작 도민 체육활동을 지도할 생활체육지도자는 고용불안정성과 낮은 급여 등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여러번 제기되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우수 스포츠클럽이 개최하는 대회와 스포츠클럽의 활동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속수당, 활동수당의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역량강화, 포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재웅 의원은 “도민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스포츠클럽의 등록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더욱 많은 도민이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활동여건도 보다 안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찬범 기자 gwnews@hanmail.net

누리일보, 신아일보 등 40개 언론사 보도

江原日報

2024년 02월 19일 (월)

사회 04면

도내 첫 교권보호 조례 마련된다

이영욱 도의원 발의
23일 본회의서 통과되면
내달 28일부터 본격 시행

강원특별자치도 내 교원들의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6일 이영욱 부위원장(국민의힘·홍천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교권 침해와 관련한 사항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도의회에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교권강화에 나선 것이다.

오는 23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내 처음으로 교권보호 조례가 마련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도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정책국 정책기획과에 교육활동보호담당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제정과 맞물려 교육활동 보호 강화와 교권 회복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가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교권침해 유형은 모욕·명

예훼손, 정당한 교육활동의 부당한 간섭 순으로 나타났다.

이영욱 교육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교권보호 4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내에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졌다”며 “조례를 통해 교육주체 상호 간의 존중과 신뢰 기반을 구축하고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하게 되면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헌편 조례안은 23일 제325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3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강동휘기자 yulnyo@kwnews.co.kr

2024년 02월 16일 (금)

이코노믹포스트

경제

강원도의회 "이영욱 의원,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통과"

이석균 부장



이영욱 의원.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코노믹포스트=이석균 부장]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부위원장(국민의힘, 홍천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교권 침해와 관련한 사항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교권강화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가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권침해 유형은 모욕·명예훼손, 정당한 교육활동의 부당한 간섭 순으로 나타났다.

이영욱 부위원장은 "지난해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보호 4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에도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례를 통해 교육주체 상호 간의 존중과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2024년 3월 28일 시행 예정이다. EP

lsg@economicpost.co.kr

엔사이드, 명성일보 등 37개 언론사 보도

江原日報

2024년 02월 19일 (월)

인물 21면



◇육동한 춘천시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등 춘천지역 내 1959년 기해년(己亥年)생 친구들이 마련한 기해동행전 개막식이 지난 16일 춘천미술관에서 열렸다. 박승선기자

‘봄내 기해동행전’ 춘천미술관서 개막

참여작가 17명 작품 전시

1959년 기해년(己亥年)에 태어난 친구들의 작품을 한데 모아 선보이는 ‘2024 봄내 기해동행전’ 개막식이 지난 16일 춘천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기념식은 육동한 춘천시장 등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동갑내기 작가 17명에 대한 소개와 함께 내빈소개, 인사말,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여작가 대표인 이면우 전 춘천교대 총장은 “기해년, 2019년. 우리는 다시 뭉쳤다. ‘봄내’라는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 솜씨를 뽐냈다”며 “동행이란 말이 행동함을 말한다. 우연한 인연이지만 필연을 강조한다. 그

래서 같이 걷는다. 다음 기해년까지 힘차게 같이 걸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민화작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권매화 작가의 ‘새날의 환희’를 비롯해 육동한 춘천시장과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의 ‘이별’, ‘자연이 그린 수채화’ 등 사진작품과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이날 개막식에는 양속희 도의원, 전종률 G1방송 대표이사, 김윤선 춘천미협회장, 전상국 김유정기념사업회 명예이사장, 오일주 전 강원문화재단 이사, 구자근, 김광남 원로작가 등이 참여해 전시회 개막을 축하했다. 오석기기자

江原日報

2024년 02월 19일 (월)

지역 13면



거진2리 경로당 개소식 고성군 거진2리 경로당 개소식이 지난 17일 거진2리 경로당에서 함명준 군수, 김일용 군의장,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19일 (월)

지역 17면



고성 거진2리 경로당 개소식 고성거진2리 경로당 개소식이 지난 17일 함명준 군수를 비롯한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물앞에서 열렸다.

江原日報

2024년 02월 19일 (월)

지역 10면



홍천고 총동문회 회장 이·취임식 홍천고 총동문회 제22대 정관당 회장 이임식과 제23대 김건보 회장 취임식이 지난 17일 홍천 K컨벤션웨딩 홀에서 신경호 도교육감, 박영록 홍천군의장, 이영욱·홍성기 도의원, 용준순·용준식·이광재·황경화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4년 02월 19일 (월)

인물동정 21면



◇엄윤순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부위원장(인제·사진 왼쪽)·박호균도의원(강릉)은 19일 오전 11시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리는 강원특별자치도양성평등위원회 제1차 정기총회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19일 (월)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19일 (월)

인물동정 14면
엄윤순(인제) 도의참석한다.
회 농림수
산위 부위
원장은 19

일 오전 11시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리는 도양성평등위원회 2024년 제1차 정기총회에

인물동정 12면
호텔 소양홀에서 열리는 강원특별자치도양성평등위원회 2024년 제1차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박호균(강릉) 도의원은 19일 오전 11시 춘천 세종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19일 (월)

종합 04면

김 지사 '산불 골프' 보도 KBS 상대 손해소 패소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입장

김진태도지사가산불이난가운데골프 연습을 했다는 보도를 한 KBS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지은희 판사는 지난 16일 김 지사가 KBS와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KBS는 김 지사가 지난해 4월 원주와 홍천에서 발생한 산불로 진화 작업이 진행되던 같은해 3월 31일 김 지사가골프연습장을 방문하고지인들

과 저녁약속을가졌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 지사 측은 "형사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나온 판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해당 보도 후, 김 지사 측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산불 위기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사과하면서도 만찬은 산불 진화 후 이뤄졌고, 골프연습장 방문은 산불 이전인 당일 오전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김 지사는 KBS 취재기자 등을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19일 (월)

종합 04면

공상공무원 간병비 지원 하루 15만원으로 인상

등급 무관 상한액 내 실비 지원

정부가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에 대한 간병비, 진료비를 인상하는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 사비로 치료비를 마련해야 했던 강원도내 소방

공무원들의 처우도 개선될 전망이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간병비는 일일 15만원 내 실비 전액 지원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상공무원 간병비

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간병 등급을 3단계로 나눠 1일 기준 3등급은 4만 4760원, 2등급은 5만 5950원, 1등급은 6만 7140원으로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간병 등급에 관계 없이 일일 15만원 상한액 내 실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요양급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항목들도 추가하는 등 진료비 현실화 개선도 이뤄졌다.

박재혁 jhpp@kado.net

江原日報

2024년 02월 19일 (월)

지역 13면

고성군의원 의정비 40만원 인상되나

주민공청회 적정성 등 발표

【고성】고성군의회 군의원의 의정활동비를 기존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최대 월 40만원 인상하는 방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고성군은 최근 김홍길 고성군의회정비심의위원장 주재로 고성군의회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의정비 인상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

견을 수렴하고자 진행했다.

군은 지난 2주 동안 전자우편을 통한 의견제출서를 받아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는 지난달 23일에 실시한 제1차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한 의정활동비 인상 기준금액 150만원의 적정성에 대한 발표와 의견 제시 등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이날 발표자 및 방청객들은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찬성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고성군의회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지역 발전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천열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19일 (월)

지역 14면

인제 상수도 현대화 5년간 76억원 절감

수돗물 200만t 누수 방지 성과
유수율 92.9% 역대 최고 기록
절감예산수도시설 개선 재투자

인제군이 지역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유수율 역대 최고 기록과 함께 최근 5년간 76억원의 예산절감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제군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지역내 유수율 향상 등을 통한 지방상수도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지난 2019년 인제·원통지역 지

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을 맺고, 지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지역 수도사업 경영수지 개선과 안정적 수돗물 공급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군 상수도 유수율(상수도 전체 공급량 중 실제 가정 등에서 사용돼 요금으로 징수한 양의 비율)은 지난 2018년 64.4%에서 2021년 66.7%, 2022년 73.1%에 이어 2023년말 기준으로 당초 사업목표인 85%를 넘어 92.9%까지 향상되면서 역대 유수율 최고를 기록했다.

군의 경우 지난 5년간 200만여t의

수돗물 누수를 방지해 생산원가 기준 7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현재 유수율을 유지하면 해마다 36억원의 추가적인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군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절감된 예산을 수도시설 개선 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오는 2024년 5월까지 인제·원통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 관로 정비, 상수도 불룩시스템 구축

등 상수도 시설 전반을 정비해 수도사업 경영수지를 개선하는 가운데 올해까지 국·도비 187억원을 포함해 총 252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당초, 사업 초기 편성된 국·도비는 167억원이었으나, 국비 2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상도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 공급은 물론 상수도경영 효율화 통해 수도요금을 안정화하겠다"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교원 kwchine@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19일 (월)

지역 17면

양양군 친환경 연어자연산란장 조성 본격화

232억원 투입 내년 5월 준공
자연하천수로·전시체험관 등
“황토어종 포함 활용방안 모색”

지난해 10월 기공식을 개최한 양양 연어자연산란장 조성공사가 본격화된다.

양양군은 우리나라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연어자연산란장 조성을 위해 지난달부터 펌프시설 설치를 위한 지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반공사에 이어 물탱크 등 펌프시설이 설치되면 연어가 소상해 자연상태에서 산란하고 부화할 수 있는 ‘산란풀’ 조성공사에 착수해 6월까지 관련 공정을 마치게 된다.

또 산란풀 조성과는 별개로 내달부터는 남대천과 연어자연산란장을 연결하는 취수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이후 9월부터 이와 연계한 산란수로와 지하관찰소 공사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연어가 자연산란할 수 있는 시설물 공사와 함께 오는 10월부터 내년 4월

까지는 기계동과 취수펌프장 등 나머지 건축관련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5월이면 연어자연산란장 준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손양면 송현리 동해생명자원센터 인근 5만 8152㎡의 부지에 총 23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자연산란장은 연어의 소상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자연하천수로 중심으 연구관과 전시체험관, 야외학습장, 생태공원 등의 부대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이들 시설물이 준공되면 그동안 기계적으로 진행되던 방류와 포획시스

템이 자연산란 방식으로 바뀌게 돼 미래산업으로의 경쟁력은 물론 친환경 연어산업화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진하 군수는 “자연산란장이 조성되면 내년 가을부터 연어의 자연산란이 가능해 오는 2026년 봄에는 자연에서 부화한 어린연어가 모천을 떠나 북태평양으로의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며 “황어, 은어 등 황토어종을 포함한 친환경 생태학습 공간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최훈

江原日報

2024년 02월 19일 (월)

지역 16면

철원 마현리 13초소 이전 가시화

군, 예산 26억 확보... 지뢰 제거 7월 말 완료 요청
내년 하반기까지 안전펜스 등 설치... 이동 간소화 기대

【철원】근남면 마현리 주민들의 숙원인 13초소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마현리 주민들은 마을 입구에 위치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13초소 이전을 최근 수년간 강하게 요구해왔다.

철원군은 주민들과 13초소 관할 군부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26억

원의 이전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현장회의 등을 통해 마현리 일대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군부대의 요구사항인 안전펜스 및 CCTV 설치를 완료하라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재안에 따라 현재 마을 주민들은 안전

펜스 설치 부지의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사용 동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80% 정도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철원군은 주민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발맞춰 인근 군부대에 안전펜스 설치구간의 지뢰 제거 작업을 올해 7월 말까지 완료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군은 주민들의 사용 동의 절차 및 군부대 지뢰제거 작업 등이 완료되면 마을 내 경작지 약 10km 구간에 안전펜스와 CCTV, 소화전 구간 수문 등을 내

년 하반기까지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후 마현리 13초소 이전이 완료되면 마현리 마을과 화천 방면으로의 이동 절차가 간소화돼 주민들이 겪던 일상생활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원군 관계자는 “13초소 이전이 무사히 마무리될 때까지 군부대와의 협의를 지속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호기자 mantough@

江原日報

2024년 02월 19일 (월)

종합 01면

춘천교대·강원도립대 포함 전국 첫 1도 1국립대 뭉치나

강원대-강릉원주대 통합 모델에
양 대학 총장들 합류 의사 표명
학생 등 반발 우려 신중히 접근

춘천교대와 강원도립대가 강원대에서 추진하는 ‘강원 1도 1국립대’ 통합 모델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미 강원대-강릉원주대 통합이 추진되는 가운데 도내 나머지 국립대인 춘천교대와 강원도립대까지 참여하면 전국 최초로 4개 국·공립대학이 통합하는 ‘1도 1국립대’ 실현이 가시화된다.

본보 취재 결과 이주한 춘천교대 총장과 김광래 강원도립대 총장은 최근 강원도립대에서 만나 ‘국립대학 거버넌스 체제’ 참여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국립대 거버넌스’는 강원대-강릉원주대의 글로벌대학사업 핵심 과제로 강원권을 포괄하는 ‘1도 1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의미한다. 춘천교대와 강원도립대가 1도 1국립대 통합모델에 합류 의사를 밝힌 셈이다.

양 대학은 이를 위해 다음 달 신청을 마감하는 ‘글로벌대학30사업’ 공모에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혁신기획서에서는 춘천교대-강원도립대가 ‘주관 대학’이 되고, 강원대가 ‘참여 대학’으로 명시돼 실질적으로는 3개 대학이 함께 글로벌대학에 도전하게 된다. 지난해 글로벌대학에 선정된 강원대는 올해 ‘주관 대학’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춘천교대와 강원도립대는 특히 글로벌대학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강원대와의 통합을 위한 논의는 이어갈 계획이다. 글로벌대학이 아니어도 양 대학은 통합 시 교육부로부터 수백억원대의 통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대학 모두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는 만큼, 학생 및 동문들의 반발을 우려해 실제 통합 논의는 극히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강동휘·최영재기자

2면에 계속

江原日報

2024년 02월 19일 (월)

종합 02면

춘천교대·강원도립대 포함
전국 첫 1도 1국립대 뭉치나
-1면에서 계속

춘천교대는 다음 달 개강 후 학생, 교수진, 직원 등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변화의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주한 춘천교대 총장은 “강원대, 강원도립대와 함께 국립대학 거버넌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대학의 앞날이 걸려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총의를 우선시하겠다”고 말했다. 김광래 강원도립대 총장은 “우리 대학은 이미 ‘1도 1국립대’에 합류할 준비를 마쳤다”며 “해안을 끼고 있는 방대한 캠퍼스는 세계적·독보적인 강점인데 통합 이후 이를 잘 활용하면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江原日報

2024년 02월 19일 (월)

종합 02면

원주~춘천~철원 철도 신설·GTX 연장될까

국토부 국가 계획 건의 철도 노선 이달 중 제출 요청
강원자치도 10개 후보 노선 5개 핵심 노선 건의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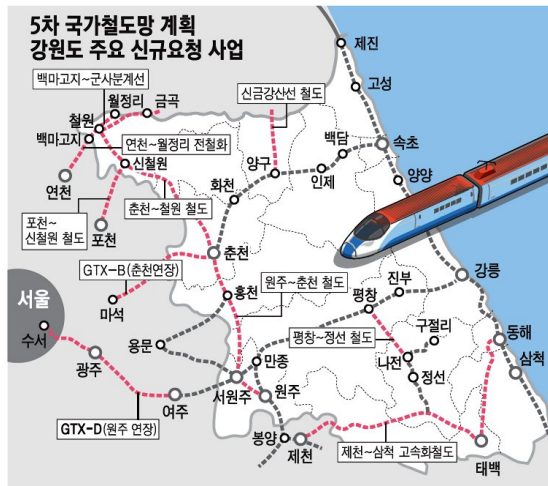
우리나라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전국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국가 계획에 신규 반영할 일반철도 사업, 올 5월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전국 광역지자체의 건의를 받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0개 후보 노선, 5개 핵심 노선 반영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최종 성적표에 관심이 쏠린다.

■원주~춘천~철원 중단철도=원주에서 춘천까지 50.7km 구간과 춘천에서 철원까지 69.3km, 총 120km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원주~춘천~철원 내륙중간철도 확정 시 영서와

영동을 순환할 수 있는 격자형 순환 철도망이 완성된다. 더욱이 영서 내륙지역과 충청·영남·호남을 직결할 수 있어 국가 내륙 물류축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2조9,0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관건이다.

■GTX 춘천~원주 연장=정부는 지난달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춘천 연장, GTX-D 원주 연장을 확정했다. 서울역~춘천 50분대, 서울 강남~원주는 30분대 주파가 가능해져 수도권 시대가 열린다.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면 사업비의 70%가 국비로 지원되지만 반영 실패 시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춘천 연장의 경우 4,238억원에 달하며 원주 연장은 3,000억원대로



추산된다. 춘천은 2030년, 원주는 2035년 개통 가능하다.

■제천~영월~태백~삼척 철도=서울 청량리와 폐광지를 관통해

영동 남부권을 잇는 철도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내 시멘트, 수소 산업의 효율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다. 2021년 발표된 제4차 철도망 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처음 반영됐지만 아직 실질적인 추진 계획은 없다. 연장은 125.4km 가량이지만 산악지대를 지나 3조5,055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든다는 점을 극복해야 한다.

■연천~백마고지 전철화=경기 동두천, 연천과 철원 신탄리, 백마고지 구간을 잇는 노선이다. 동두천~연천 20.7km 구간은 지난해 말 전철화가 완료됐으나 연천~철원 20.6km 구간은 2018년 7월 이후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철원 구간 전철화가 이뤄질 경우 철원지역 관광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사업비는 1,792억원이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최기영기자

江原日報

2024년 02월 19일 (월)

지역 12면

강릉원주대, 강원대와 통합 진통

【강릉】강릉원주대가 강원대와 '글로벌대학 30' 통합을 앞두고 학내 진통을 겪고 있다.

대학 내 평의회는 최근 평의회 심의에서 글로벌대학 통합 과정상 불합리한 부분들을 문제 삼으며, 강원대-강릉원주대 간 통합신청서 제출을 보류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교수회, 동문회, 직원연합회,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평의회는 양 대학의 통합 과정에서 춘천·원주·강릉·삼척 등

평의회 "운영방식 논의 없이 강원대와 일방 추진" 반선섭 총장 "중요한 사안 추후 협상 통해 결정할 것"

통합 대학의 4개 캠퍼스의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 없이 일방적인 협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반선섭 총장이 지난 16일 60여페이지가량의 통합신청서에 날인해 강원대에 보낸 것

으며 임기 말 총장의 독단적 운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평의회 관계자는 "이임식을 3일 앞둔 총장이 대학 내 최고 심의기구인 평의회 결정을 무시하고 대학과 지역사회에 부당한 졸속 통합을 추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 운영방식은 민감

한 사안으로, 구성원들의 의견 많이 반영돼야 하지만 일방적인 절차로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반선섭 총장은 "양 대학 간 통합을 전제로 글로벌 사업을 신청한 것이기에문에 통합에 이견이 있다면 글로벌 사업을 정상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미래 대학의 생존과 발전을 담보할 수 없어 빠른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출한 통합신청서는 예비적 성격으로 제출하는 것이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고 명시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임 직전 처리에 대해서는 현재 신임 총장이 언제 임명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글로벌사업을 추진해 온 총장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영재기자 yj5000@

2024년 02월 19일 (월)

강원도민일보

종합 02면

강개공 '춘천 봉어섬·고성 잼버리' 출자 경영개선 나선다

정부,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도유지 현물출자 등 대책 마련

지난해 5년 만에 흑자전환 성공

부채경감·신규사업 발굴 '환영'

강원개발공사가 부채경감을 위해 춘천 봉어섬과 고성 세계잼버리수련장 등을 출자받기로 하는 등 경영개선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도와 강개공은 부채 비율 경감에 집중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는 정부가 지역투자 유도를 위해 지방공기업 자본금 확대를 비롯해 타 법인 출자한도와 산업단지 개발 공사채 발행한도 상향, 부채산정 기준 완화, 출자타당성 검토 면제제도 신설 등 지방공기업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선 것과 맞물린다. 강원도는 이르면 상반기도 소유자 산출 강원개발공사에 넘길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출자 이후 수익을 거둘

수 있고, 규모를 갖춘 도유지를 출자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현물출자 검토 대상지는 춘천 봉어섬(12만 8073㎡·196억 2078만원)과 고성 세계잼버리수련장 부지(41만 8873㎡·182억 4985만원), 옛 농산물 유통장 부지(우두동 일원 13만 5433㎡·추정 220억 9699만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현물출자는 지난해 연말 기준 730% (잠정·6200억원)에 육박하는 공사의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앞서 도는 원주시 드림랜드 부지와 옛 농업기술원 부지를 공사에 넘겼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은 주택공급·토지개발 등 지역 건설 경기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방공기업의 투자 여력을 늘려 지역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취지다.

지방공기업의 타법인 출자한도를 기존 10%에서 최대 50%로 늘리고, 산업단지 조성사업 참여 시 공사채 발행한도를 상향 (광역개발공사 300%→350%·기초개발공사 200%→230%)

했다. 이같은 조치로 각 지역 개발공사는 공사채 신규 발행을 통해 지역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

강개공은 정부 발표를 환영했다. 강개공은 "공사채 발행 심의 시 지지체대행사업 교부금을 부채에서 제외하는 것이 신규 사업 추진 여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환영했다. 강개공 관계자는 "지난해 5년 만에 경영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며 "경비 절감과 신규 사업 발굴 등으로 부채 비율을 지속 낮춰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덕현

2024년 02월 19일 (월)

강원도민일보

지역 10면

춘천 호수정원 조성 '사유지 보상' 관건

기행위 토지 추가 매입 부결

"보상절차 지켜본 다음 결정"

9개 필지 97명과 협의 필요

시 "4~5월 이후 보상안 수립"

춘천시가 의암호 호수자원을 활용해 상중도거점의 호수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 부지를 추가 매입하려 했으나 춘천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욱이 춘천시의회가 기

존에 확보한 사유지의 토지보상 과정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유지 보상이 호수정원 조성 사업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18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보건)는 최근 제331회 임시회의회의를 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 '춘천 호수정원 조성을 위한 토지취득'을 삭제하고 수정가결했다.

당초 춘천시는 기존 확보한 8개 필지(1만 3826㎡)에 11개 필지(2만

2619㎡)를 추가로 매입해 호수정원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심의에서는 사유지 보상과정과 문화재 발굴 여부 등 추진 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에 매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제철 의원은 "사유지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결국 사유지 보상에 따라 사업의 속도가 결정될 전망이다.

문제는 협의해야 할 토지소유자가

100명에 육박한다는 점이다. 춘천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9개 필지, 97명과 보상 협의를 해야 한다. 일부 필지의 경우 토지소유주가 35명, 53명에 달한다. 일부 소유주는 해당 사업에 반발, 도시관리계획처분 취소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춘천시 관계자는 "4~5월쯤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 구체적인 보상 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며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세현

2024년 02월 19일 (월)

江原日報

지역 11면

“하루 2천톤 물 퍼내면 지하수 고갈 불 보듯”

이슈 현장 원주 신림면 송계리 생수공장 추진

주민 “환경영향조사도 못 밟겠다” 사업 철회 촉구

업체 “정부 보고 신뢰 가능해” 시 “주민 요구 검토”

【원주】원주 신림면 송계리에 생수공장 건립을 놓고 원주, 영월, 충북 제천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대규모의 취수정에 따른 지하수 고갈을 우려하고 있다.

■“하루 2,000톤 규모 취수정”=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해 12월 신림면 송계리에 하루 2,000톤 규모의 취수정 4정을

갖춘 생수공장의 임시허가를 받고, 원주시에 지난달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굴착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시는 현행법에 따라 3만㎡ 이상의 개발행위 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필수로 받아야 한다며 반려했다. 업체 측은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업체 측은 2020년 강원자

치도에 임시허가를 받았지만, 2022년 기간 만료로 허가가 취소된 상태다.

■“지하수 고갈 유발”=신림면을 비롯해 영월, 충북 제천시 주민들은 ‘생수공장 반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신림면의 경우 평소에도 식수와 농업용수 등이 부족해 224곳의 관정용 지하수 펌프로 이를 해결하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한 마을에서 취수하는 지하수 30톤의 66배에 달하는 물을 퍼올리는 생수공장이 생길 경우 지하수 고갈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

다. 주민들은 최근 업체 측에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환경영향조사 논란=주민들은 업체 측의 환경영향조사에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광열 생수공장 반대위원장은 “이해당사자인 개발사가 고용한 업체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조사를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열린 제24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최미옥 부의장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 관계자는

“환경영향조사는 정부기관에 보고하는 신뢰할 수 있는 평가인 만큼, 물 부족 의견을 받으면 당연히 사업 진행이 어렵다”며 “지하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정을 개발한 후 공개하고, 주민 요청에 따라 취수량을 조절해 생활·농업용수 부족을 방지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며 허가와 관련해 주민 요구 및 건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인규기자 kimingyu1220@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19일 (월)

사설/칼럼 19면

공연 축제 관광자산화 전망 밝다

-여행객 유입 전국 상위권, 강원관광 방향 제시

공연과 축제 등 문화예술 콘텐츠가 관광에 미치는 파급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 역사 유적에 못지 않은 영향력을 가집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강원도 공연축제에 따른 관광객 유입 효과가 전국 상위권이라는 분석이 나와 시선을 끄니다. 강원 특별자치도와 시군은 수준 높은 공연 축제를 적극적인 여행 자산으로 활용 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존의 관광 자산에 더해 공연과 축제를 개최한다면, 사계절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지역 공연 축제가 관광객 유치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는 문화 관광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1년 동안 진행된 조사는, 공연예술통합 전산망 데이터와 전국 시도별 관광지점 입장객 수 기초 통계, 카드사의 매출전표 데이터 등을 활용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 공연 축제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강원 지역 공연 축제들은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23.8%, 관광 관련 업종 신용카드 소비 지출은 16.9% 증가시켰습니다.

축제가 지역의 다른 관광수요를 발생시키는 지 알아보기 위한 이번 조사에서, 강원도는 공연 축제 개최로 인한

관광객 유입 영향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부 지역에 공연 축제가 집중되고, 해당 지역의 관광 업종 기반 시설이 잘 구비돼 해당 지역의 관광객 유입 효과가 높다는 것이 연구진의 판단입니다. 장르별로는 대중음악의 효과가 25.7%로 제일 높았고, 무용, 서커스·마술, 서양음악 순으로 나타나 향후 공연 축제의 개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코로나19로 문화예술이 침체를 겪던 시기에도 강원 지역은 선방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도가 가장 높았던 2020년 상반기 공연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을 제외하면 강원도가 1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공연과 축제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관광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대중음악과 클래식 공연, 연극 등을 포함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상시 펼쳐지는 관광지로 진화해야 합니다. 공연 축제에 따른 소비 증가 등 경제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당일 관광의 한계를 극복하고, 묵어가는 여행지로서 자리잡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정선 아리랑 공연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전통 문화예술 공연 상시 공연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19일 (월)

사설/칼럼 19면

국제스케이트장 ‘강원’이 타당하다

-도내 올림픽 빙상시설 연계해야 상생효과 커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할 신축 시설 유치 공모에 강원 3곳과 수도권 4곳이 경쟁에 나선 가운데 2월 중 심사 일정이 나오는 대로 제안서 검토와 현장 실사가 진행됩니다. 강원은 춘천, 원주, 철원이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 빙상장 건립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김포·동두천·양주, 인천 서구에서 교통 접근성을 큰 장점으로 내세우며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가을 대한체육회 측에 올림픽을 두 차례나 치른 3만 7485㎡ 7600석 규모의 강릉 오벌을 태릉스케이트장 대체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장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선수 7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한 탓에 강릉은 원거리여서 활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때문에 이번 대체 빙상장 건립 공모에 강원은 인천·경기에 비하면 초조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라지구를 내세운 인천 서구는 인천국제공항, 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E노선을 내세우며 교통편을 강조합니다. 물론 춘천, 원주를 비롯해 포천·철원 고속도로 연장 추진에 있는 철원 모두 수도권과의 접근성

이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태릉스케이트장 철거 예정인 2027년을 고려하면 불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최적지가 교통편에만 초점을 둘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강원은 겨울스포츠 성지로 자연적 문화적 환경이 조성돼 있습니다. 기존 경기장 활용 및 군부대 유허부지 이용과 같이 비용을 줄일 만한 요소도 있습니다. 신축 빙상장 건립에 2000억원의 막대한 국비를 투입해야 하므로 비용 절감의 이점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동계 올림픽을 치른 국제빙상장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국가적인 손실이기도 합니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각종 국제 규모의 겨울스포츠 시설을 갖춘 강원 지역의 풍부한 장점을 연계해 상생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10년간 전국동계체육대회가 강원도에서 개최됐을 뿐만 아니라 지난 15일에는 2024~2028년 5년 동안 주 개최지를 강원으로 결정한 도·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간 업무협약을 통해 겨울스포츠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도내에 구축된 다양한 겨울스포츠 기반 시설과 시너지를 내는 발전을 가져오려면 이번 국제스케이트장 역시 강원도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江原日報

2024년 02월 19일 (월)

사설/칼럼 19면

기업들의 출산장려책, 세제 혜택 등 강구해야

부영그룹이 '1억원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내 기업들도 다양한 출산장려금·육아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기업들의 각종 출산장려금은 직원 출산 장려뿐만 아니라 우수 인력을 계속 유치하려는 기업의 중요 경쟁력 확보 수단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황성 서울에프엔비는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첫째 임신 및 출산 시 태아검진비 30만원, 출산지원비 100만원 등 총 130만원의 축하금을 제공한다. 흥천 산돌식품도 아이의 초교 진학 전까지 매월 5만원을, 초교 입학 시 10만원, 중학교 20만원, 고등학교 30만원, 대학교 100만원 등의 교육비를 각각 지원한다. 춘천 바디텍메드는 출산축하금과 더불어 2014년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황성 국순당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택자금 및 생활안전자금 0.5% 저리 대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기업들의 각종 출산 지원 대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 등이 강구돼야 한다. 최근 부영은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에게 출생아 1인당 1억원씩을 지급했다. 출산장려금을 급여 형태로 주게 되면 직원들이 고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고려해 지급 형태도 '증여' 방식을 채택했다고 한다. 직원이 받는 출산장려금

이 '근로소득'으로 잡히면 소득세와 지방세 등으로 4,180만원을 떼야 할 판이다. 이에 부영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려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직원이 증여세(10%) 1,000만원을 내야 한다. 문제는 또 있다. 회사도 출산장려금을 받은 직원 1인당 2,600만여원 정도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못 받는다.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은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도 급여의 연장선상으로 간주한다. 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여, 보수,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근로자의 출산이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지원하는 수당에 대해선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게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제 혜택의 전부다. '포스코 네쌍둥이'로 유명한 부부도 회사 측이 지급한 카니발 차량과 출산 축하금 및 양육지원비 5,600만원이 근로소득에 포함돼 고액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한다. 국민에게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 준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하루빨리 명확한 신호를 줘야 한다. 과격적인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할 때다.

江原日報

2024년 02월 19일 (월)

사설/칼럼 19면

의대생 집단 휴학, 사회적 책무 저버리는 처사다

한림대 의대 4학년생들이 지난 15일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발하며 1년간 집단 휴학을하기로 결의했다. 한림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이날 의료정책대응TF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은 만장일치로 휴학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전국 의대생들 중 최초의 집단행동이다. 인턴과 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은 20일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단체 회장직도 내려놓는다. 대전성모병원 인턴에 이어 두 번째 전공의 사직이다. 압도적인 여론에 밀려 집단행동을 유보한 전공의들이 개별 사직하는 신호탄이 될까 걱정스럽다. 전공의나 의대생이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의료 현장에 미칠 파급 효과는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전공의들은 대형 병원에서 응급 당직의 핵심을 맡는 만큼 이들이 집단적으로 의료 현장을 떠난다면 그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불편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 집단행동 때도 의료 현장이 매우 큰 혼란을 겪었다.

하지만 지금 강원지역의 의료 현실은 어떤가. 지방 소멸의 가속화와 함께 의료 인프라가 붕괴된 암울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도내 대학병원은 2년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과목도 미달이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필수 의료를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도

내 대학병원 공공의료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전공의 교육 시스템 개선 등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지역 병원은 수역원대 고액 연봉을 내걸어도 의사를 영입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이렇다 보니 응급실을 전전하다 환자가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의사 부족으로 무너진 필수·지역 의료 현장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것이 지역의 최대 과

제인 상황에서 의대생들의 인식과 행동은 무척 부적절하고 안타깝다.

이미 전국 7개 병원의 전공의 154명이 사직서를 냈다. 한림대 의대생 뿐만 아니라 전국 35개

한림대 의대 4학년생 1년간 집단 휴학 결의

전국 35개 의대생 20일 동반 휴학계 제출기로

환자 불모 집단 이기주의 비판만 자초할 뿐

의대생들도 20일 동반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했다. 의료 인력은 매년 공급되어야 하는데 단체행동을 통해 일정 기간 공급을 마비시키는 방식으로 정책 철회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지역의료체계는 붕괴됐고 10년 후엔 의사 1만5,000명이 모자란 게 현주소다. “힘들게 공부해서 의대 왔는데, 향후 기대 수익이 떨어질 것 같다”는 이기주의가 큰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2,000명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수술을 앞둔 환자가 있는 보호자들은 의료 대란 우려에 떨고 있다. 환자를 불모로 집단행동에 나서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의대생들이 이제라도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